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62.62	↑ 코스닥	816.51
	(+30.55)		(+14.09)
↓ 금리 (미국 9년)	3.774	↓ 환율 (원-달러)	1296.90
	(-0.017)		(-4.70)

[시중은행 과점 논란]  
‘완전 경쟁’  
안정성·실효성 의문  
금융시장 실익 따져야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산업계, 스마트팩토리·중고차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사활

### 막으려는 ‘주춤 시늉’

LG전자, 신사업 정관 추가 주목  
화장품판매·기간통신사업 반영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  
부동산 개발·임대업도 추가

산업계가 ‘주춤 시늉’에 돌입하는 가운데, LG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은 신사업을 공식화하며 미래 먹거리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달 셋째주부터 정기 주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15일, 포스코홀딩스가 17일 개최를 공시했고, 현대자동차가 23일, LG전자가 27일로 뒤를 이은다. SK하이닉스는 29일, SK스퀘어가 30일 등 월말까지도 주춤은 이어질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장 주목받는 주춤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들어 신사업 발굴에 공을 들이는 상황, 정관을 추가하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미래 준비를 본격화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번 주춤에서 서승우 서울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전장 사업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 교수는 현재 서울대 지능형차 IT연구센터장과 대한전자공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장 부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LG전자는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화장품판매업과 기간통신사업이다. 추진중인 신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기간통신사업은 LG전자가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공을 들여온 미래 먹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G 기술을 활용해 특정 기업이나 장소에 연결성을 제공하는 무선 시설망 ‘프라이빗 5G’ 사업을 하기 위함.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한 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현대전화 사업을 철수하면서도 5G와 6G 등 통신 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고, 2018년 로보스타 인수에 이어 S G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 로봇 관련 기업 투자도 이어왔다. 창원 공장에 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시키며 기술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기술력도 수준급, LG에너지솔루션과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화장품 판매업은 뷰티기기 프라임을 활용해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종전까지는 가전제품만을 판매했지만, 앞으로 화장품 분야를 접목해 뷰티 산업 전체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계열사인 LG생활건강과 협력도 가능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광화문 앞 일제 강점기 철로 발굴

서울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제 강점기 전차 철로가 발견됐다. 전차 철로는 1917~1966년 존재했던 것으로 안국동의 전차 철로와 효자동의 전차 철로가 세종로 방향으로 이어진 형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오는 16일~18일까지 사흘간 광화문 월대와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광화문 앞 월대 발굴현장 모습.

/뉴스

사업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자사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한 만큼,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드디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 정관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과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다. 인종중고차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이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역시 중고차 매장을 위한 ‘하이테크 센터’ 신설을 위한 조치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韓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정부입장

“韓日 관계 사실상 방치돼 와 양국 공동이익 부합 방안 노력”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며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박 장관은 국내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선택근로제 허용기간 확대 등  
사업주·근로자 선택권 강화

올해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

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 지적을 의식해 관련 안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일 강제징용 해결 방침에 경제 6단체 환영 뜻 /사진 뉴스스
- ▲ 민주당 광주시장·정의연 등 ‘위안부합의보다 못해’ 비판 /사진 뉴스스

- ▲ 이주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 엄중 대처 방침 밝혀
- ▲ 한미연합훈련에 핵 탑재 ‘B-52H’ 폭격기 동참



- ▲ 국민의힘,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경민 예비후보 확정
- ▲ 대통령실 ‘전대 개입’ 논란에 안철수 법적 대응 시사 /사진 뉴스스